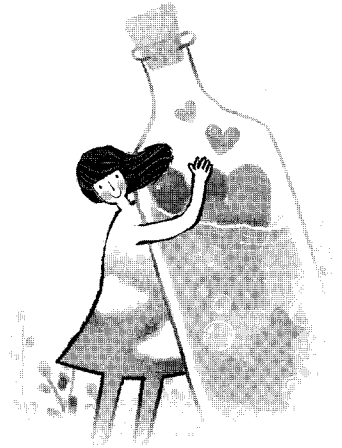




# 대학 선진화-

## 대학 구조개혁 사업 해외동향을 중심으로

유현숙 |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연구실장



### I.

오늘날 국경을 넘어 고등교육 서비스 공급이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주요국들은 대학교육의 선진화를 위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요국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대학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있는가? 그 중의 하나가 대학의 구조개혁<sup>1)</sup> 추진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의 구조개혁 동향은 크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거버넌스 개편, 기관의 인수합병 및 통·폐합 등을 통한 구조조정, 선택과 집중을 통한 우수대학의 육성, 사회적 수요변화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대학설립, 정부와 대학의 협상 또는 협약을 통한 재구조화 추진 등이 그것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양상들이 선정된 국가들을 통하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고찰해 봄으로써 우리의 대학교육 선진화를 위한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여기에서 구조개혁은 대학 내 학과나 학부의 통·폐합, 대학 간 통·폐합 및 연합 등을 통한 대학의 양적 감축을 의미하는 구조조정, 대학의 전반적인 체제 개선을 통한 재구조화를 포함하는 거시적인 개념을 활용하고자 함.



## II.

## 거버넌스 개편 및 구조조정의 병행: 일본

우리와 유사한 대학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국립대학의 법인화를 통한 거버넌스 개편, 사립대학에 대한 경영진단을 통한 구조조정을 병행함으로써 대학 교육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있다. 일본의 국립대학 법인화는 고등교육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등장한 1987년 임시교육심의회의 “국립대학 특수법인”이 그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당시 나카소네 수상의 자문기관으로 등장한 임시교육심의회는 침체되어 있는 일본의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의 구조개혁을 통해 교육·연구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국립대학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특수법인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후 국립대 법인화 문제는 다소 소강상태를 유지하다가, 10년 후인 1997년 4월 “특별행정법인화”로 인해 다시 이 문제가 부상하였다. 대학의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경쟁을 도입해야 한다는 슬로건하에 공무원 10% 삭감과 함께 국립대학의 법인화와 지방이관, 민영화 등이 결정되었다. 2001년에는 “국립대학 구조개혁 방침”이 발표되면서 법인화가 급물살을 타게 되었으며<sup>2)</sup>, 2003년 7월에는 국립대학법인화법이 통과되었고, 2004년 4월부터 전국 89개 국립대학이 국립대학법인으로 이행되었다. 이에 따라 국립대학법인들은 시민법 아래의 법인격체(법인)를 구성하였다. 법인으로서 대학은 다른 법적 구성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법인은 정부로부터 부여

받는 건물이나 토지와 같은 법인의 자산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재원을 차용하거나 대부 또는 다른 법인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게 되었다(그러나 사실상 정부가 이에 대해 통제를 하고 있다). 이 외에도 대학법인은 총장, 이사회, 대학평의회, 운영위원회와 간사위원 등을 두게 되었으며, 기존의 체제에서는 대학평의회에서 총장을 선출하였으나 새로운 체제하에서는 총장선출위원회에서 선출한다.

국립대학의 구조개혁과 더불어 일본은 사립대학의 경영혁신을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일본의 사립대학의 경우도 근래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투자의 한계,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 그에 따른 미충원과 부실사학의 증대, 대학교육의 질 제고 필요성 증대 등으로 사립대학의 경영혁신이 시급한 시점에 있다. 2007년 현황을 보면 총 559개 4년제 사립대학 중 221개 대학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여 39.5%의 미충원율을 보였고, 전문대학의 경우는 365개 대학 중 61.6%인 225개 대학이 정원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일본 사립학교진흥재단 자료). 이에 따라 귀속 수입으로 소비지출이 전혀 불가능한 학교법인의 비율이 4년제 대학 5.0%, 전문대학 10.9%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부성은 경상이 보조를 중심으로 한 사학조성사업, 사립학교진흥·공제사업단을 통한 대부사업으로 시설설비 등의 정비 보조, 사학에 대한 세제상의 특례조치 등을 지원사업과 아울러 학교법인의 경영개선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학교법인 경영개선 지원을 위해 일본은 대학법인을 귀속수지차액 비율, 인건비 비율, 총부채 비율, 전수금 보유율, 유동비율 등의 지표를 활용하여 분석한 후 정상 상황, 경영이 곤란한 상태

2) 2001년부터 추진된 '도야마 플랜'에 의하여 101개였던 일본의 국립대학은 2년 만에 89개로 통합되었다. 일본의 경우 국립대학 간 인수합병은 1) 지방의 신설 국공립대학이 의과대학을 비롯한 단과대학을 흡수 합병하는 형태(이마니시 대학과 이마니시 의과대학의 통합 등) 2) 동일 지역 내 동질대학의 통합(도쿄 산신대와 도쿄 수산대를 도쿄 해양대로 통합 등) 3) 국립과 공립대학 간의 통합(기후대학과 기후약학대학 통합 등) 그리고 4) 교원양성계 대학의 통합(오사카 대학, 교토, 효고, 나라 교육대 통합 협의 등)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를 “옐로우존 상황”, 자력재생이 극히 곤란한 “레드존 상황”, 그리고 “파탄 상황” 등으로 구분하여 각기 차별적인 활성화 전략을 적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옐로우존 상황은 지표를 통해 경영상 간과할 수 없는 징후가 보이거나 개혁노력에 따라 개혁이 가능한 상태를 의미하고, 레드존 상황은 과대한 채무로 인해 자력으로는 재생이 매우 곤란한 상태이며, 파탄 상황은 모집정지를 하기 전에 자금 부족으로 파탄한 상태를 의미한다. 경영상황 진단에 따른 지도조언은 기본적으로 사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경영상의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모델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대응지도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문부과학성은 2003년 학교경영지도실을 설치하였고, 2005년에는 ‘경영이 곤란한 학교법인 대응 방침’을 마련하여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 사립학교 진흥·공제사업단은 2003년부터 사학경영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경영 곤란으로 진단된 옐로우존 상황은 목표와 기한을 명확히 하여 경영개선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실행한 후 계획 미달성시에는 모집을 정지하는 조치를 취하며, 자력재생 곤란 상황인 레드존 상황은 사적 정리를 통한 채무정리, 임시재생을 통한 채무정리, 자주적인 모집 정지 등을 적용한다. 한편 사학법인이 경영파탄으로 판단될 경우, 그 처리는 법적수속 정산형, 임의수속 정산형, 법적수속 재건형, 임의수속 재건형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되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김미란, 2009 p.25 참조). 이러한 일본 사립대학의 구조조정 방식은 사립대학의 자율성을 전제로 하고 경영상의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한편으로는 경영상태 구분을 위한 틀이 불명확하고, 자금고갈을 위해 금융기관과 교섭을 중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생 방안이라기보다는

퇴출을 위한 방안이 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문부과학성의 지도가 낙인이 되어 부실사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실과될 위험이 있다는 문제점 등이 제기되고 있다(김미란, 2009: 27).

## 고등교육 기관의 인수합병 및 우수 대학 집중육성 병행: 중국

중국은 양적인 면에서는 고등교육 대국(大國)이기는 하나, ‘고등교육 강국(強國)’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다(Zhang, 2005). 그러나 중국은 가까운 장래에 고등교육 강국의 위치에 진입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구조개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학 인수합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선택과 집중지원을 통한 우수대학 육성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1992년부터 연도별 합병 현황을 보면, 2002년까지 총 733개의 대학이 합병에 참여하여 288개의 합병대학이 탄생하였다. 연평균 약 2.55개의 대학이 하나의 대학으로 통합된 셈이다. 중국대학 합병의 특징은 하나의 종합대학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기존의 종합대학이 단과대학들을 흡수·통합하거나 동일지역의 종합대학을 합병하는 등의 방식으로 거대 종합대학을 건설하고 있다. 1949년 사회주의 중국 성립이후 단행된 대규모의 고등교육체제 구조조정은 기존의 종합대학을 공업, 농업, 의학, 사범 등의 단과대학으로 분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에 반하여 1992년 이후부터 추진되고 있는 현재의 구조조정은 기존의 단과대학 중심의 대학들이 다시 종합대학으로 흡수 통합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이 이렇게 대학합병을 통한 종합대학육성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한 것은 변화된 고등교육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즉 고등교육의 산



업화, 대중화에 따라 규모의 경제에 의해 운영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고등교육체제의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대학들이 현재 선택과 집중 논리에 의해 중점지원을 받고 있는 각종 정부지원사업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중점대학과 중점 학과의 육성을 통한 우수대학 육성사업' 인 211공정, '세계 일류의 연구중심대학의 육성사업'으로 불리고 있는 985공정 등을 통하여 장차 100여 개의 세계적 수준 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유현숙 외, 2005 참조). 중국의 이러한 대학 인수합병 방식은 현재 한국의 상황과는 다른 목적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학 선진화 과제에 직접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지는 않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는 학생인구의 감소로 대학의 합병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중국의 경우는 증가하고 있는 학생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오히려 반대의 이유로 인수합병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상이한 필요성에 의하여 대학의 인수합병이나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이를 통해 결국 고등교육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더 나아가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목표점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 새로운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고등교육 구조개혁: 북미와 유럽

유럽을 중심으로 한 국가들의 개혁동향을 보면, 대학의 거버넌스 개편(OECD, 2003), 대학의 민영화 추이와 병행하여, 변화하는 수요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고등교육 기관을 설치하여 고등교육 시스템을 재편해 나가고 있다. 예컨대, 핀란드의 경우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직업 훈련원을 통·폐합하는 구조조정 사업을 추진한 후, 폴

리테크닉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거나, 다수의 OECD 국가에서는 제3의 고등교육유형으로서 지역사회 칼리지(community college)와 3단계 고등교육기관(tertiary institute)이 등장하고 있다(OECD, 2004a). 이 기관들은 좀 더 높은 수준의 교육에 접근할 수 있다는 융통성과 형평성, 고등교육단계에서 직업교육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다. 또한 지식기반사회에서 노동자들이 필요로 하는 높은 수준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는 측면과 대학보다는 비용이 저렴하고 좀 더 노동시장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제3유형의 고등교육체제는 각 나라의 상황에 따라 그 형태가 다소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대체로 1) 직업준비 및 일반적인 학습 2) 기초 혹은 상위직업기술에 초점을 둔 직업 준비교육 3) 지역사회 봉사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기관들의 교육목적이 직업교육에 더 무게중심이 있는 경우는 노르웨이, 핀란드, 독일, 스위스 등이며, 직업교육뿐만 아니라 대학의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이나 기초기술을 보완하는 수준에서의 일반교육에 더 중점이 가해지는 경우는 북미, 프랑스 등의 경우다. 어떠한 경우이든지 이 기관들의 목적은 더 많은 사람들이 고등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 기관들은 교육목적에 따라 기업형 혹은 시장형으로 각기 다르다. 유럽에서는 이렇게 새로이 부상하는 고등교육제도들이 어떻게 기존의 교육체제와 훈련체제에 연계시킬 것인가를 중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4가지 유형의 연계를 시도하고 있는데 그것은 1) 기존의 대학과의 연계 2) 상급 중등학교와의 연계 3) 노동시장 프로그램과의 연계 4) 성인교육과의 연계다. 이러한 동향이 고등교육의 보편화를 이룬 우리의 상황에 적용되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고등교육 구조개혁이 대학의 기능에 대한 재음을 통해서, 그리고 노동시장



그리고 성인교육과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가에 주안점을 두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참고할 필요가 있다.

## 주정부와 대학의 협상을 통한 구조 개혁: 미국 버지니아주

미국 버지니아주의 경우 최근 대학 구조개혁의 실천을 주정부와 대학 간의 협상을 통하여 실현하고 있다. 이는 고등교육 재구조화 요구가 주정부와 대학 양측으로부터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주정부로서는 경제사정의 악화에 따라 대학들이 등록금을 인상하게 되자, 이를 통제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아울러 1990년 이후 일기 시작한 학교 책무성 논의는 고등교육기관에게도 확장되어 대학이 처한 여건과 무관하게 더 나은 성과를 내도록 대학들을 압박하였다. 그러나 고등교육기회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이에 따라 학생교육비 및 기관운영비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되나, 주정부의 지원은 한계가 있게 되자 주정부는 고등교육에 대한 본격적인 개혁을 추진하게 되었다. 한편 대학 측에서도 개혁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버지니아에는 12개의 4년제 공립대학과 24개의 2년제 공립대학이 있는데, 이 중 버지니아대학(University of Virginia), 윌리엄앤매리대학(College of William and Mary), 그리고 버지니아기술대학(Virginia Technology and State University) 등이 대학재정운용의 자율성, 재정지원의 안정성, 그리고 등록금 책정의 자율성 등을 핵심으로 하는 고등교육개혁안을 처음으로 제안하였다. 당시 이들 세 대학은 1990년대 이후 다른 대학들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자율성을 누리왔기에 독자적인 대학운영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었으나, 대학에 대한 주정부의 재정지원이 불안정함으로써 중장기적 경영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한 주정부 지원 다음

로 가장 중요한 재원은 학생들의 등록금이었으나, 버지니아주 공립대학들은 등록금 책정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었음에도 실질적으로는 주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들 세 대학은 2002년과 2003년 일련의 논의를 바탕으로 대학이 실질적인 등록금 책정 권한을 갖고 대학재정운용상의 자율권을 확보하며, 독립적인 정치기구로 대학을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이른바 '헌장대학(Charter Colleges)안'을 처음으로 제안하였다. 이는 대학운영 전반에 대한 자율성·독립성의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버지니아주는 일련의 논의 끝에 2005년 4월 '자율성과 책무성의 교환'이라고 불리는 고등교육행·재정재구조화법(Restructured Higher Education Financial and Administrative Operation Act)을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의 핵심은 세 가지로 1) 버지니아의 모든 공립대학들은 주정부의 기관으로 남아 있다는 것 2) 모든 고등교육기관을 수행평가에 따라 3단계로 나누고 이에 따라 행·재정적 운용의 자율성을 차등 적용한다는 것 3) 수행평가에 의해 최고 상위단계인 3단계를 받은 대학들은 협약대학(Covered University)의 지위를 획득하며, 세부적인 대학의 행·재정적 자율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주 고등교육평의회와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협약은 정부가 대학의 구조조정을 직접적으로 단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협상의 이행에 따라 대학에게 협약대학의 지위를 부여하고, 행·재정 운용에 있어 자율권을 부여함으로써 결국 구조개혁의 효과를 야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정부는 대학에 대한 주정부의 요구사항을 제시하였고, 한편으로 이에 맞는 대학에 대한 주정부의 구체적인 권한이행 사항을 마련하였다. 주정부에서 대학에 요구하는 사항과 대학에 대한 권한이행 사항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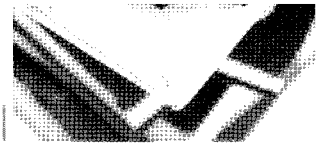


주정부의 대학에 대한 요구사항	주정부의 대학에 대한 권한이행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외계층 학생이 고등교육에 더 많이 진학할 수 있도록 할 것</li> <li>- 학생들이 정해진 시기에 졸업할 수 있도록 학업지속률을 증가시킬 것</li> <li>- 주 경제개발을 촉진할 것</li> <li>- 학생의 학업성취 증대를 위해 다른 학교들과 긴밀한 협력을 할 것</li> <li>- 정해진 재정적·행정적인 관리 목표를 달성할 것</li> <li>- 그리고 6개년 계획을 수립할 것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수입에 관계없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일정수준의 등록금을 유지할 것</li> <li>- 다양하고 광범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것</li> <li>- 잉여자산에 대한 매각 권한</li> <li>- 토지이용권의 획득</li> <li>- 학문적 활용을 위한 대학소유 재산 수입 또는 자산 임대 가능</li> <li>- 주정부의 사전 승인 없이 10만 불 이상 되는 정보공학 구입 가능</li> <li>- 행정 및 전문 교수요원 채용에 대한 독자적 정책 수립 가능</li> <li>- 정부로부터의 사전승인 없이 건물공사를 위한 최선의 프로젝트 수행 방법 결정 가능</li> <li>- 주정부와 양해 각서(Memoranda of understanding) 교환 가능</li> <li>- 대학이사회에 등록금 책정 권한 승인 등</li> </ul>

버지니아의 고등교육 재구조화 추진의 의의는 주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주정부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관철시켰다는 것,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 대학 역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었다는 것, 그리고 고등교육의 재구조화가 대학과 주정부의 양측으로부터 논의되고 협의된 만큼 그 실현가능성이 높게 전망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대학과 주정부 모두가 자신들의 의무이행 사항과 권한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실현과정에서 나타나는 추가적 문제점들 역시 합의를 바탕으로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등록금 문제에 관한 한 주정부의 실질적인 권한이양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는 전망이다. 비록 권한이양을 약속하긴 하였지만 주의 경제사정이 다시 악화되고, 높은 등록금 인상에 대한 사회적·정치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주정부가 실질적인 권한이양을 유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등교육재구조화법에 의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대학들은 행·재정적 독립능력이 있는 일부 대학들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 III.

이상과 같이 고등교육 구조개혁을 위한 해외동향을 살펴보았다. 국가마다 역사적, 사회문화적 배경이 다르고 고등교육이 처한 현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개혁동향을 우리의 상황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대학 구조개혁은 대학의 선진화를 위한 필수 과제이며, 그 방식은 양적인 감축과 아울러 고등교육의 체제 개선을 위한 질적 접근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대학 운영의 민주화를 위한 거버넌스의 개선, 기관의 통·폐합을 통한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 새로운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제3유형의 고등교육기관 설치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국립대학 법안화, 기관의 통·폐합, 사립대학의 구조조정사업을 위해서는 이를 이미 실천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험을 참고하여 그 성공 및 실패 요인에 대한 심층 분석이 요구된다. 아울러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대학 양자는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논의”와 “협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대



학에 대한 책무성 요구와 대학의 변화에 대한 자체 요구가 충분한 협상을 통하여 절충될 때, 구조개혁사업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확률은 높아질 것이다. ■■

### 참 고 문 헌

- 고장완(2009). 버지니아의 협약대학 정책. 미간행 원고.  
 김미란(2009). 일본의 대학 구조개혁 동향, 한국교육개발원 현안보고 OR 2009-01-1.  
 유현숙(2005). 고등교육개혁 국제동향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2005010.  
 Lampinen, O(2001). The use of experimentation in educational reform: The case of Finnish polytechnic experiment 1992-1999. Tertiary education and management 7 : pp.311-321.  
 Kaneko(2005). Incorporation of National Universities in Japan.  
 OECD(2003). Education Policy Analysis, Paris : OECD.  
 \_\_\_\_ (2004). Changing Patterns of Governance in Higher Education, Educational Policy Analysis.  
 State of Virginia(2005). Restructured Higher Education Financial and Administrative Operation Act of 2005.  
 Zhang Li(2005.3). Analysis in the Reform Progress of Higher Education in China, KEDI-NCEDR joint Seminar, Beijing.

### 필 자 소 개

#### 유현숙

고려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 취득하였다. 교육부 대학 구조개혁 선도사업, 누리사업 등 평가위원, 지방대 육성위원회 위원, 미국 미시건대학(2003)과 벤더빌트대학(2007-2008)의 객원연구원(visiting scholar)을 역임하였다. 현재 한국교육행정학회 이사, 한국교육정치학회 회장에 재임 중이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21세기 고등교육 변화와 전망』, 『고등교육 국제동향 분석』, 『정부의 고등교육개혁을 위한 재정지원사업 평가』, 『미국의 고등교육 거버넌스 분석과 시사점』, 『대학 특성화 국제적 동향 분석』 등이 있으며, 주요 관심분야는 고등교육 거버넌스, 고등교육의 국제화, 대학평가, 대학 재정운영 등이다.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국립대학 법인화, 기관의 통·폐합, 사립대학의 구조조정 사업을 위해서는 이를 이미 실천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험을 참고하여 그 성공 및 실패 원인에 대한 심층 분석이 요구된다.

